

광매칼럼



박상원

상무이사·사회복지학박사

군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이고 시대적 사명이다. (헌법 123조)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동시에 지역 간 균등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활발하다. 행정구역 광역화와 연계한 메가시티 구상은 부산·울산·경남(790만명)과 대구·경북(510만명)이 주도하고 있다. 가장 먼저 통합논의를 시작한 대구·경북은 지난해 9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2022년 대구·경북 통합을 목표로 5단계 관문형 의사결정 방식으로 공론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충남을 아우르는 충청권 메가시티(550만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올해 말까지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으며, 2030년까지 메가시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경제권으로 만들어 지역 간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반면 광주·전남·전북을 하나로 묶는 호남권 메가시티(520만명) 구상은 광주와 전남 두 지역이 행정통합

'호남RE300' 균형발전 새 판을 짜자

논의를 한다는 선언적인 합의만 했을 뿐 진전이 없다. 전북까지 아우르는 메가시티 구상은 요원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균형특위)가 출범하면서 초광역 메가시티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균형특위는 "국가균형발전은 민주당의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라면서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건설하고 광역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방소멸의 위기가 도래했다. 서울공화국의 처참한 식민지로 남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제시한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호남초광역경제권 구상 - 호남RE(Renewable Energy)300'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이면서 고착화된 지역불균형 발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 판을 짜는 청사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호남RE300'은 그린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이 결합된 호남형 '한국판 뉴딜' 전략으로 2034년까지 RE100, 2050년까지 RE3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초대형 경제공동체 프로젝트다.

우선 RE100은 2034년까지 호남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초광역에너지망

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RE300은 2050년까지 추가로 재생에너지 200%를 생산해 타 지역 및 국가로 수출하는 구상이다. '호남RE300'은 광주와 전남·북 520만 시·도민이 에너지 자립과 초과 판매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경제공동체로 호남이 모색해 온 새로운 미래비전을 담고 있다. 목표가 달성되면 증세 없는 주민복지도 가능해진다. 신안 안좌도 주민들이 올 4월부터 받는 태양광 발전사업 배당금 같은 형식이다.

'호남RE300' 성공의 핵심 조건은 초광역 에너지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다. 재생에너지 전원공급망과 저장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만 치중하면 지난 제주도 사례처럼 기존 전력이 수용할 수 있는 발전 출력량을 초과해 결국 발전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호남RE300'에는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142조6천417억원, 초광역에너지망 구축 60조6천941억원 등 국비 및 민간자본 포함 총 203조3천35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선공약이 아니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호남RE300'의 실현을 위해서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와 지역정권이 원팀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북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의 다른 목소리를 내

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내년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될 전망은 낙관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북까지 아우르는 '호남공약'의 상징성에, 2050 탄소중립이란 국가 전략에 따라 산업 전 분야의 저탄소화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을 신재생에너지 공급기지로 만들어 모든 기업이 필요에 따라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송갑석 의원은 "호남권은 권역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전국 1위(전국 32%)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고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다. '그린뉴딜'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 속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정보화 선진국으로 추격해서 선도형으로 판을 바꾼 것처럼 지금의 호남은 '그린뉴딜'의 물결을 타고 재생에너지로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총격을 최소화하고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국도를 바로잡으려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메가시티) 육성이 불가피하다. '호남RE300'은 호남권 초광역에너지공동체로 호남의 미래를 여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지자체와 지역정권이 상생의 정신으로 협력해 호남의 르네상스를 열어야 한다.

社說

꼬여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대선 공약화 필요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 민간공항 통합을 군공항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항개발 정부 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지역사회의 다름이 심화되고 있다. 수년째 미해결 현안으로 남아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장기 표류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상생 협력의 차원에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진일보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정부의 약속은 빈발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정부위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집중 관리 갈등 과제 선정 건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역 주민 간 이견 등을 이유로 갈등 과제로 선정됐으나 4년 넘게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역대 총리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중재에 나섰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 계획에서 지역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토록 한 통합의 전제조건 역시 책임있는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민 의원은 "해결 의지마저 의심받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만 들 것이 아니라 의견 제시 거부 등 조정 과정에 비협조적인 중앙행정기관 패널리티 부여를 비롯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4년 10월 광주시가 정부에 건의한 '범정부 협의체' 회의도 올 5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가지못해 시늬만 한 꼴이라는 비난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광주공항을 통합해 무안공항을 한반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라면 당장 팔을 걷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각 정당의 공약화도 요구되고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약은 주지하듯 국가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국가 주도로 해법을 찾는 게 마땅하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응적 차원의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자치경찰제 100일, 지역사회 변화의 움직임

광주와 전남 자치경찰이 출범 100일을 맞았다. 자치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사고나 재난 지원,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사고 처리, 학교폭력 등 주민들 삶과 직결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지역사회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광주 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했다. 지난해 11월 북구 운암동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계기로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시설 개선이 이뤄졌다. 모두 157개교에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표지 이설, 91개소에 대한 보호구역 범위 조정, 403개소의 보호구역 시종점 불일치 개선 등을 마무리했거나, 진행중으로 전해졌다.

주민의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소통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방문 활동을 펼치는 가 하면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정책 제안이 가능한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후 우려됐던 치안 공백이나 업무 혼선이

현재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최선을 기울인 결과다.

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어르신 안전과 교통사고, 학교폭력 예방 등 생활밀착형 행정에 역점을 두고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를 열고 있다. 특히 1호 시책으로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의결, 전남경찰청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호 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최근 본격 추수기를 맞이해선 교통사고 및 농축산물 절도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취약장소 위주 탄력 순찰을 강화했다.

자치경찰이 성공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기존 치안의 관점을 벗어나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의 관점에서 쟁건다는 원칙에 집중해 순조로운 출발이다. 앞으로도 자치분권의 전면 확대에 맞춰 협업 체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반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더 보호받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더 힘써 주길 바란다. 지금처럼 흔들림 없이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하겠다.

의정칼럼



강정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여순사건특별법, 희생자 명예회복 위해 보완돼야

다했다.

필자는 전남도의회 의원으로서 여순사건법 제정을 위해 2018년 9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회를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여순사건법 제정 서한문을 발송하고,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여순사건법을 제정해 줄 것을 권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법안심사소위원장, 이형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등 주요 인사를 찾아다니며, 쌍둥이 사건인 제주 4·3사건이 2000년부터 특별법이 제정돼 비판이라는 역사적 왜곡이 바로 잡혔고,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도 열렸다.

또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의료비와 생활비 지원이 가능해지고, 위령묘역·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모두가 노력해서 73년 만에 얻은 여순사건법이다. 부당한 국가권력으로 인해 일생을 억압받고 살아왔던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국가의 자발적인 사과와 명예회복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노구를 이끌고 머리를 조아리며 얻어낸 성과인 것이다.

그러기에 시간이 많지 않은 유가족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운동과 같이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저항한 민중항쟁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이 거듭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여순사건법에 규정된 3년이라는 신고와 진상규명조사 기간에 연장규정이 없다. 제주 4·3진상규명위원회는 12년간 5차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기간과 조사기간의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여순사건법에는 신고조사 시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2014년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여수·순천 10·19사건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 걸음인 법 제정조차 못하고 73년이 흘렀다고 호소하며, 여순사건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셋째, 현재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지 73년이 지나 많은 희생자와 유가족이 돌아가셨고, 생존자도 대부분 80-90대의 고령이다. 또한 어르신 이에 부모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연좌제로 묶여 제대로 된 생계를 꾸려나가지 못하는 등의 고통을 겪어온 유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

넷째,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를 입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

을 위한 배·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여순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등의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하기 위한 민중항쟁으로서 인정받도록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통한의 세월 73년, 속절없이 지나간 시간에 희생자와 유가족들 대부분이 돌아가셨고 생존하신 분들도 고령이다.

앞선 민중항쟁들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바로 서는 과정에서 발생된 시행착오를 다시 겪으며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추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사항이 여순사건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에서 마련할 시행령에 직권조사 범위 확대와 명예회복 위원회에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가족과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만들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여순사건법 제정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개최되는 추모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한을 달래 주기를 기대해 본다.

전남 농촌 보육 악순환 고리 끊어야

취재수첩



임후성 (정치부 기자)

전남 농촌지역의 '보육 난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도시와 달리 마땅히 아이를 맡길만한 곳이 없는 면(面) 단위 지역이 많다보니 의지를 갖고 귀농한 청년들마저 다시금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육정책 방향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 농촌 보육은 오랜 기간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어린이집 개원에 필요한 최소 영·유아 정원은 3명인데, 5명을 채워도 개원을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건립과 개원에 필요한 최소 시기가 1년인데 반해 이 기간을 견디지 못한 부모들이 전출을 결심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개원에 필요한 최소 영유아 수 3

명은 군(郡) 직영일 때 해당된다. 농촌 어린이집은 원아 수가 11명 이상 돼야 원장 인건비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유아반은 8명 이상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보조받을 수 있지만 면 단위 어린이집은 8명 조건을 충족시키기가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신안 압해읍 고이리 소재 '증도어린이집 고이분원'이 단적인 사례다. 이 곳은 한번도 개원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고이분원은 2억4천만원(국비 9천100만원·도비 7천450만원·군비 7천450만원)의 예산을 투입돼 2012년 말 완공됐지만 최소 아동수 미달로 9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착공 당시에는 5명의 아동이 있었지만 1년 뒤 완공 시점에 4명이 전출가면서 개원이 불가능해졌다.

농촌공동아이들복지센터 사후 관리 기간은 시설 설치 완료 후 10년이다. 내년 12월까지 원아 수요가 없을 경우 고이분원은 폐원 및 지역사회 여가 지원시설로 활용된다.

최근 4년(2017~2020년)간 전남지역 어린이집 187곳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 어린이집 폐원은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해 불가항력이라고 하지만 행정력이 뒷받침된다면 고이분원과 같은 경우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보육 공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더 이상은 없길 바란다.

독자 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공경은 없고 혐오 대상이 된 노인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800만명을 넘어섰고 노령화 비율이 16.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머지않은 2026년 또는 그 이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노인인구 증가는 경제·사회 전반에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노인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령연금·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

으나 노인 빈곤율, 고독사, 높은 노인자살률, 노인 학대 증가 등 수치는 여전히 노인들 삶이 고달프고 외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툭딱', '할매미', '연금충' 등 혐오와 차별의 프레임이 덧붙여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고 어느새 노인 혐오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바이러스가 됐다.

혐오에 원인을 찾자면 노인 부양을 위한 복지 비용이 증가하고 노인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젊은 층

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 거버넌스 차이에 의한 세대 간 충돌,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만이 폭발해 혐오로 발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혐오는 또 다른 혐오

를 불러일으킨다. 무엇보다 내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기 위해서는 누구든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보호와 인식 변화가 조성될 때 혐오에 대한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으며 노인 공경에 대한 도덕적 가치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윤홍승·담양경찰서 홍보담당)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8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9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30 지역특집부 650-2060 정치부 650-2090 사 진 부 650-208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문화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광 고 문 의 650-2099 광고국 650-2072 경영지원국 650-2010 기획사업국 650-2079 입 무 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국,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